

신년 기획 '위기극복, 제도약 2021년' / (2) 2공항 여론조사 어떻게

‘안심번호’ 돌출변수 등장... 난관 봉착

도·의회 지속적 입장조율... 예정대로 추진될지 ‘촉각’ 언론사 통한 진행 방안 등 제안 일정 지연 불가피할 듯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의 ‘찬반’을 묻는 여론 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안심번호’ 발급이라는 뜻하지 않은 변수를 만나 여론조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여러 논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안심번호 발급과 관련한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

▶ 여론조사 합의-지난해 12월 11일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의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방식이 주요 골자다.

특히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조사와 성산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조사를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제주도가 도의회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주장해온 성산주민 가중치 반영이 사실상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된다. 합의문 발표 당시 전체조사, 별도조사를 두고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또 다른 분란거리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양측 합의문에 따르면 제주도와 도의회는 찬반 비중이 관계없이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론조사는 유선 20%와 무선 80% 비율로 실시되며 각 조사

시 2개 업체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여론조사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국토부가 그대로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 뜻하지 못한 변수 ‘안심번호’ = 당초 제주도와 도의회는 합의문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여론조사를 완료한 뒤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론조사 시 무선 조사를 위해 필요한 ‘안심번호’ 발급이 개인정보 문제로 어려워지면서 제주도와 도의회는 계획을 차질이 생겼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만 안심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발급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

련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가 없고 공공기관에 발급한 사례도 없기 때문에 안심번호 발급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언론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안을 제주도에 제안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언론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은 선거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국토교통부가 당초 제주도와 의회에 제안한 조건에 부합할 수 있어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속적으로 입장을 조율하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안심번호 발급 문제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면서 당초 오는 11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는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조실장 허법률·의회사무처장 문경진

도, 업무 공백 최소화 차원 오는 13일 상반기 인사 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자로 기획조정실장에 허법률 지방부이사관을, 의회사무처장에는 문경진 지방부이사관을 지방부이사관으로 각각 승진 임용했다. 제주도는 오는 15일 단행할 예정인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현대성 전 기획조정실장과 오정훈 전 의회사무처장이 지난 해 12월 31일자로 명예 퇴직함에 따라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조기에 인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2면 허법률 선임 기획조정실장은 서귀



허법률 실장 문경진 처장

문경진 선임 의회사무처장은 제주 시부시장, 정책기획관, 교통항공국장 등을 거쳤다.

도는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5급 승진 의결자 33명을 발표하는데 이어, 오는 8일에 전 직급 승진인원을 공개하고 13일에 인사발령 대상자를 사전예고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반드시 처리”

본보·(사)제주와미래 기획쟁점·배보상 계획 등 진단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이날 8일까지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은 공동기획으로 지난해 12월 26일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영훈 4·3유족회 차기회장 당선자와 오영훈 국회의원, 박찬식 제주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장이 참석해 4·3특별법 개정 일정과 전망, 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인 배·보상 방법, 진상조사의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 관련기사 9면 이 자리에서 오영훈 의원은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다”라고 강조했다.

또 오 의원은 최근 도민사회의 의

견이 엇갈리고 있는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의 배·보상과 관련 ‘위자료’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두고 범위에 따라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오 의원은 “4·3특별법이 개정되면 여순항쟁 관련법이 제정될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이런 과정에서 배·보상에 대한 재정규모에 의한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을 강구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배·보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제시했던 것 같다. 기재부가 ‘위자료’라는 개념을 배·보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국민들의 인식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오영훈 4·3유족회 차기회장은 “유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명예회복이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배·보상의 문제들이 명분 있게 결정되리라 보기 때문에 유족들은 ‘위자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제주시 17위 서귀포 21위

사회안전지수 제주 상위권

전국 155개 시·군·구 가운데 제주지역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모두 상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 온라인 패널 조사기업 피엠티아이, 머니투데이 등은 공동으로 전국 시·군·구 중 표본 숫자가 적은 지역을 제외한 155곳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을 종합한 ‘2021 사회안전지수’ 순위를 4일 공개했다.

사회안전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용산구(71.27점)에 이어, 서울 강남구(70.70점), 울산 남구(68.74점), 부산 동래구(67.50점), 서울 강동구(66.34점), 전북 남원시(65.99점), 경기 과천시(65.41점), 서울 서초구



한겨울 꽃망울 터트린 흥매화 4일 제주시 노형동 한 가정집 정원에 흥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려 눈길을 끌고 있다. 강희만기자

(64.84점), 서울 마포구(64.00점), 부산 해운대구(63.71점) 순이었다. 제주지역은 제주시가 59.38점으로 17위를, 서귀포시는 58.79점으로 21위를 기록하는 등 모두 상위 30위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사회안전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 서구(33.37점)로 조사됐으며, 인천 미추홀구(35.02점), 인천 계양구(37.77점), 경북 구미시(38.20점), 경기 의정부시(39.1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사회안전지수는 생활안전, 경제활동,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크게 4개 분야를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정부의 통계자료 등 객관적 지표와 주민 설문조사 등 주관적 지표를 활용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은 실천이 희망을 만들고, 최고의 백신입니다.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답입니다.
함께 하나되어 코로나 19를 이겨 나갑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